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2/ 8 통권 160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공간을 경영한다

중부세 ·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각종 회사 특성별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 중 업무관련 부분만 손금인정됨
- 중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 하세요
-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아님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부가세 신고 · 납부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납세지(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사업장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시행령 제8조)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유통·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업의 전부 · 일부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건설업 ·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장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는 업무총괄장소)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아닌 경우	재화보관 관리하는 단순 하치장, 단기 행사하는 임시 사업장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09호 / 주간 6호

2023. 02. 08.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부가세 신고·납부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납세지(사업장소재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각종 회사 특성별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	2
C E O 에 세 이	CEO는 공간을 경영한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평가 - 매출 부가세 신고 시 코드 문의 -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기사의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부가세 신고 계산서 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 중 업무관련 부분만 손금인정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식 증여 및 반환 시 과세체계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0 11
직 장 인 Survival	따라하면 인간관계 달인이 되는 5가지 법칙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 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 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안-1862, 2022.04.0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 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12, 2022.04.08)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가산세 등 제외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아님	13
세 무 정 보	-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과세 합리화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16 19 23
회 계 정 보	-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3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5

각종 회사 특성별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대분류	감사기구 설치유형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	비고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의무(자율) 설치	감사위원회	-
	내부감사	감사(감사인 선 임위원회의 승인 必)	-
대형비상장, 비상장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의무(자율) 설치	감사위원회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회사임
	내부감사	감사(감사인 선 임위원회의 승인 必)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2)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연 환산)
일반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자율구성	감사위원회	-

	내부감사	감사	다음 요건 중 2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내부감사 없음	회사	불입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유한회사	내부감사	감사	다음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 사원수 50명 이상
	내부감사 없음	회사	불입자본금 10억 이내,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사원총회 결의

CEO는 공간을 경영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세계적으로 장사에 이골이 난 민족으로 유태인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월가를 장악하고 세계경제를 요리하는게 유태인과 그들 자본이 아닌가. 또 아라비아의 상인도 만만치 않다. 사막을 가로질러 목숨을 걸고 낙타와 함께 장사를 해 온 민족이다. 그들이 장사섬을 헤아리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중국도 세계 강대국이던 당(唐)나라와 원(元)나라를 거쳐 청나라 몰락까지 오랜 세월 유럽까지 실크로드를 깔았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누비며 일류상품 비단, 도자기, 차(茶)를 공급했다.

그 중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던 상품이 도자기와 차(茶)였다. 유럽에서 China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뜻하기도 하지만 도자기의 다른 이름이다. 최근세에 영국의 본 차이나(Bone China)는 송아지 뺏가루를 고령토에 섞어 좀더 질기고 얇고 가벼운 도자기를 만들어 낸 개량품이다. 그래서 China랄 영국 도자기의 영광을 상징하는 상표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도자기가 China가 되었듯이 차가 곧 tea라는 용어가 되었다. 차의 베이징어 발음은 cha이지만 주요 수출창이던 푸젠성 사투리 발음은 te라고 했다.

바로 그것이 영어 tea의 어원이다.

중국, 유태인, 아랍인 세 민족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열악한 환경과 고난을 질기게 이겨 온 역사와 공간 극복에 있다는 점이다. 유태인은 나라 잃은 지 2000년 가까이 세계 만방에서 떠돌이를 했다. 중국 상인 역시 그렇다. 상인이나 상업이란 말도 원래 상(商)나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중국인의 상술’ 저자 강효백씨는 지적했다.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토벌하자 천하는 주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은 세상을 누비면서 장돌뱅이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세상이 사람들은 그들을 ‘상인(商人)’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돈 주머니를 켜차고 있는 6천만명의 회교들 핏속에는 상나라 사람들의 유전자가 숨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진 오늘날은 Know-How 못지 않게 Know-Where가 더욱 중요하다. 핵심기술과 Know-How가 한 곳에서 한 기업에서 값싸게 모두 해결되기 힘들다. 각기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 체어맨을 보자.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독일 벤츠 라이선스 생산이고, ABS장치는 독일 보쉬 것이고 에어백은 스웨덴 노기아 것이다.

“싼 곳에서 생산하여 비싼 곳에서 판매한다.”

이것이 Know-Where의 핵심전략이다. 바로 공간경영이다. 나이키도 그렇다. 디자인과 상품 기획은 수요가 제일 많은 선진국 본부에서 하고 생산조립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한다. 한 때 한국은 신발 왕국이었다. 그 덕에 아직도 상당부분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신발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조립산업이다. 조립산업은 사람의 손이 좌우한다.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소재와 부품산업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Know-How와 Know-Where를 잘 결합할 때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27일(금)	1월 30일(월)	1월 31일(화)	2월 1일(수)	2월 2일(목)
미	달	러	(USD)		1230.20	1228.70	1230.80	1231.40
일	본	엔	(JPY)		947.51	942.22	946.15	957.06
영	국	파운	(GBP)		1524.65	1517.32	1515.61	1525.46
캐	나	다	달 러	(CAD)	924.34	917.49	924.93	927.47
홍	콩	달	러	(HKD)		157.14	156.82	156.99
중	국	원	(CNH)		182.33	182.09	182.09	182.34
유	로	화	(EUR)		1336.98	1332.83	1337.02	1355.28
호	주	달	러	(AUD)		874.00	866.54	867.78
싱	가	폴	달 러	(SGD)		937.33	934.76	936.7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9.83	289.51	288.53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Q** 다자간 무역거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국내사업자 갑은 국외사업자 B에게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자 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과 병 모두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A** 을은 갑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고, 갑으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기초로 병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모두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평가

- Q** 회사에서 지분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되었는데요 (비상장회사) 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결산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1. 공정가치평가를 어떤식으로 하는지요?(비상장업체임)
2.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계정??)
- A** 1.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란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으로 반영합니다.

매출 부가세 신고 시 코드 문의

- Q** 회사가 용역 업체로부터 창고 용역을 제공 받고 있는데.
이때 창고 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발행 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에 수입 금액 제외 와 매출 코드 중 어느 것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A 귀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임대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발급분 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기사의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기사에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업체에서는 보상금은 입금해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A 제품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금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계산서 문의

Q 업체에서 전자계산서를 0원으로 발행을 받았습니다.
0원이어서 마이너스로 취소하는것도 불가능 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에 발행 건수만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거래 상대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0원이라면 잘못된 세금계산서일 확률이 높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실확인하시고 잘못 발급된 것이면 취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 중 업무관련 부분만 손금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현대 기업들의 업무 특성상 많은 일들이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외부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비용도 이러한 비용 중의 하나인데, 통상 기업들은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회사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용료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법상 업무관련 통신비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의 사용요금은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나 통신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종업원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사규 등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내근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정도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부영업직원이 아닌 내근직원의 경우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내근직원에게 지원되는 휴대폰 사용료는 법인의 순수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한 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지원한 휴대폰 보조금 등이 업무관련 통신비로 인정받더라도 법정지출증빙영수증의 수취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

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대납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기가 어려운바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휴대폰사용료에 대한 비용처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적격증빙영수증 수취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 제도 46012 - 11811, 2001. 6. 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업무관련된 통신비의 매입부가가치세도 공제 가능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휴대폰사용료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 서이46012-11470, 2003.08.09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에 따른 회계처리

회사에서 부담한 임직원의 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통신비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업무관련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휴대폰 사용요금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는 통신비로 반영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주식 증여 및 반환 시 과세체계

반환시기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총 6개월)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총 6개월)
당초 증여분	과세 제외	과세	과세
반환분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화

올해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주식 부문

- 상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5% 이하 · 기간 2년 준수 시 양도세 특례
- ISA운용가능 재산에 회사채와 중소 · 중견기업 장외주식 추가
- 수도권 인근 인구감소지(옹진 · 강화 · 연천)에 종부세 · 양도세 특례

기업 부문

- 국가전략기술에 LED · QD-OLED 추가해 최고 수준 세액공제
- 유턴기업 세제 지원시 사업장 폐쇄 · 신설 기한 연장(2년 → 3년)
- 해외 자회사 지분을 10% · 6개월 지분 보유시 배당금 비과세

상속 · 증여 부문

- 직전 3개년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 50%(상장사 30%) → 40%(20%) 완화
-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가치 있는 문화재 · 미술품에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 대상	
	월세 수입	보증금 · 전세금
1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주택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 안함
2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주택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주택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에 동시 해당하면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 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연금저축 · IRP 비교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누구나 (펀드의 경우 예금자 보호)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연소득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연 700만원
운용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연금수령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인출가능	법적 인정 사유에 한해 가능



따라하면 인간관계 달인이 되는 5가지 법칙

1. 노크의 법칙 (Knock)

“당신이 먼저 노크하라”

마음의 문을 열려면 내가 먼저 노크하라. 그리고 나를 공개하라.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까지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2. 거울의 법칙 (Mirror)

“거울은 주인이 아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속의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한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3. 베품의 법칙 (Give & Take)

“먼저 주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품어야 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짝의 법칙 (Couple)

“저절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

짚신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기 마련이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생기기 쉽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낭만의 법칙 (Romance)

“당신만 낭만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아님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340, 2022.05.18

질 의

- 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사업개시 전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PFV에게 이전하며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1. 본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회 신

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가 사업개시 전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게 이전하며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전기사용 승인권, 영업권 등(이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SP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313, 2022.03.25

질 의

- 신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임
- 신청인은 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4가지 유형에 의해 출자 중이며, A법인 주식을

질의

- 질의 사실관계의 A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A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출자유형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귀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12, 2022.04.08

질 의

- '21.1.1. 현재 3주택자(A B C)가 1주택(C)을 양도 후 남은 2주택(A B)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해당 특례주택(B)의 비과세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회 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B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 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서면법규재산-209, 2022.05.23

질 의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100% 증여하고 자녀는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가산세 등 제외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 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연중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면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앞서 쓴 비용만이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 화면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건수 2020년 1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말정산, 사이트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 교복·기부금·보청기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태)은 27일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

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가운데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사는 동생 대학등록금, 유학 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도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실거주 목적 분양권 취득한 1주택자,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처분하면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처분기한에서 1년 연장된 수준이다.

해당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 및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부세 ·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 기획재정부, 2023. 1

□ 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중부세 완화 >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중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 작년 정기국회에서 중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의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1.2~6.0%→0.5~5.0%)
 -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중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중부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①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적용대상) ①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②공익법인, ③주택조합, ④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⑤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⑥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⑦종중, ⑧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 중부세법 개정사항

- ②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중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겠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 임대 →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 건설·공급
※ 중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③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중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되어 공가 상태인 주택
※ 중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④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중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2.12.21.)

* 수 도 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중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제)

□ (기대효과)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용시기) 올해분 중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추진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

□ (제도 개요) ①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②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①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②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 (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 (적용시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기획재정부, 2023. 1

-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
-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 개요

- ▶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 ▶ 기타주주 범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❶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 ❷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현 행	개정내용
본인이 최대주주	친족 -6촌혈족 -4촌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추 가>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친족 -4촌혈족 -3촌인척 -(좌동) -(좌동) 혼외출생자 생부·모 (좌 동)
본인이 非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삭 제>

-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22.12.29.*)이 보유기준임
 - * '22.12.30일은 휴장일

참고 1 - 주요 QA

1.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이유

- ☐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친족,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 ❶ 본인이 소액주주이어도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되어 대주주로 과세되어 현대판 '연좌제' 라는 비판
-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과 부모를 합하여 10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소액(500만원)을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과세

②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 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사례: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총계
보유금액	500만원	500만원	9억원	9,000만원	10억원

⇒ 현재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

2. 기업오너 등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분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 ☐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지배 및 과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유지됨
- ☐ 다만, 그 범위를 국민인식 변화,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 조정에 맞게 합리적 조정

3.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과세가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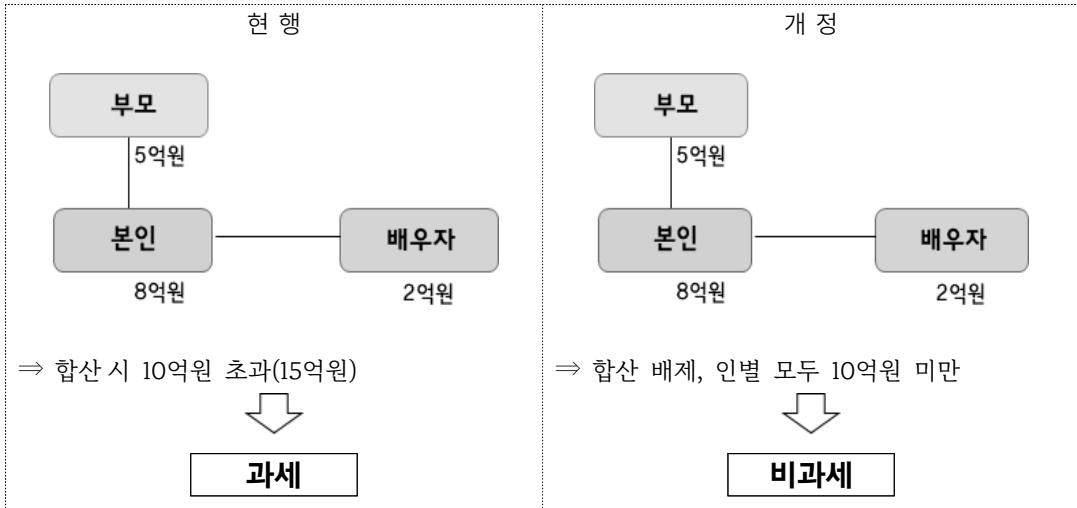
* (예) 본인 9.9억원, 배우자 9.9억원 보유시: (종전) 과세 → (개정안) 비과세

- ☐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보아야 함
- ☐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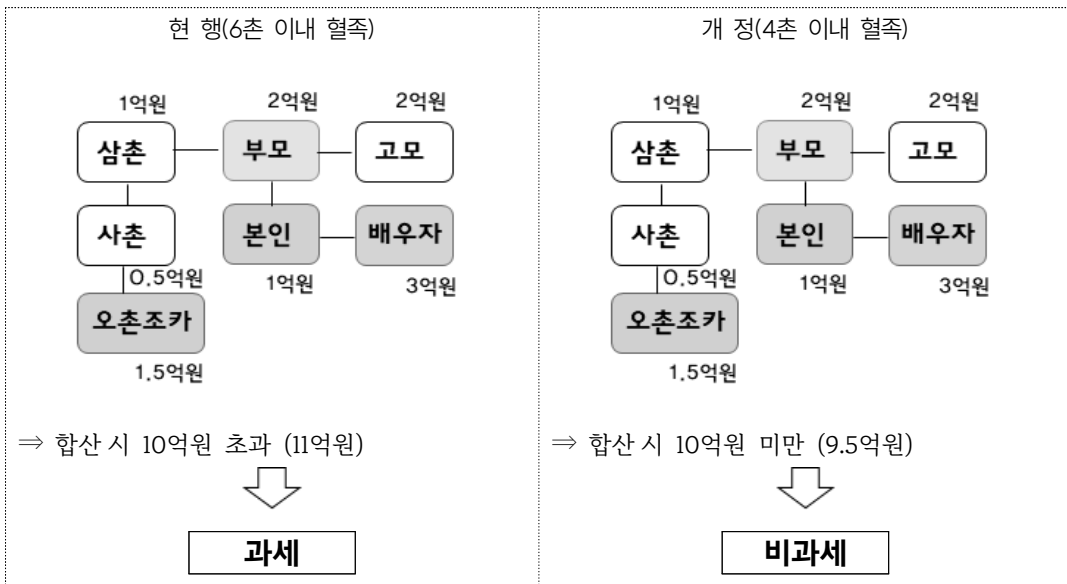


참고 2 - 기타주주 합산 과세사례(현행 vs. 개정 비교)

〈非 최대주주〉



〈최대주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3.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전심사 신청건수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①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합니다.
 -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



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로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개,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계	34,122	22,305	37,525	26,430	38,413	26,342
일반	1,453	9,658	1,526	13,413	1,450	13,409
중소	32,669	12,647	35,999	13,017	36,963	12,933

* 출처 : 국세통계연보

2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①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 ②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사전심사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u>신고누락분에 대하여</u>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4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신청 범위)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 22.7월부터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기술검토)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사전심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증 서류 예시 〉

항 목		서류 예시
연구활동(기술검토) 증빙		
공통증빙	인 적 구 성	① 연구원 등록현황(KOITA)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증빙	인 건 비	급여대장
	재 료 비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거래처 등)
	위탁개발비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 내역)
	수탁개발비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6 납세자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을 요청받는 경우, 동일한 홈택스 화면을 통해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국세청은 어떤 내용을 심사하나요?

- ☐ (심사 내용) 국세청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❶ (기술검토)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❷ (비용검토) 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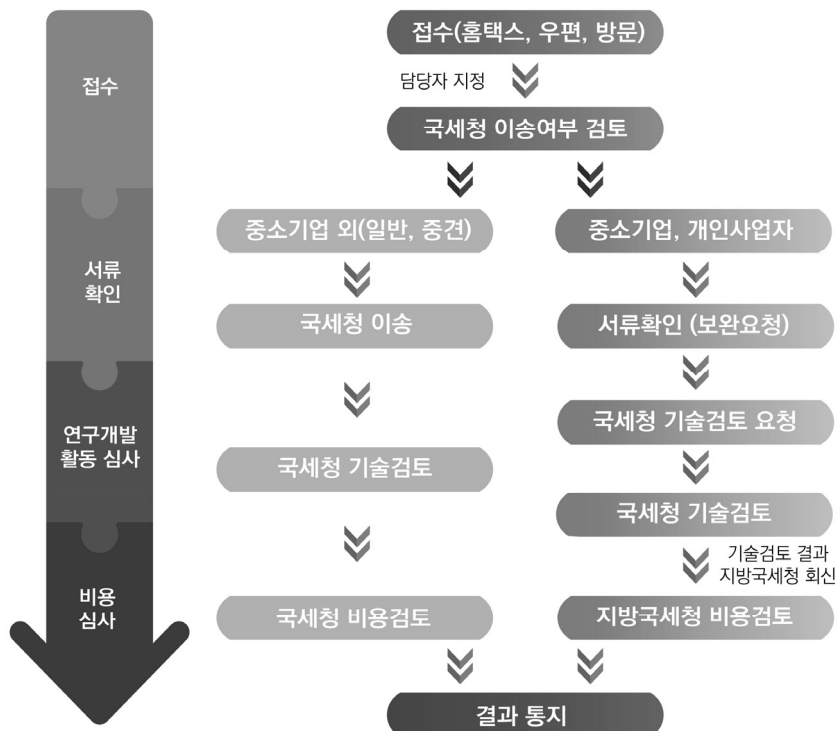
기술종류	정 의	검토 기관	
		기술·비용검토	기술분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내국인이 고용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비	국세청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 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 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종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분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심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taxcredit.kiat.or.kr>)에서 신청 가능

8 국세청 심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사 관할) 기술검토는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비용심사는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담팀에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국세청 심사는 ① 서류확인(보완요청) ② 서면심사(기술·비용검토) ③ 현장확인(필요시) ④ 검토보고서 작성 ⑤ 결과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담당자는 진행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심사 요청)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흐름 |





9

올해 사전심사에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청자 편의성 강화) 기존에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 제출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① 신청인이 심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② 그 동안 사전심사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신청인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홈택스에 5단계로 세분화된 진행상황 조회화면을 개발하였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5단계 진행상황 |

①접수완료 >> ②검토 중 >> ③기술심사중 >> ④비용심사 중 >> ⑤처리완료

- (간이계산기 제공) 홈택스 신청화면에서 제공하는 간이계산기를 통해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련 지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업이 연구활동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체 수집이 가능한 연구소 인정서 등을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R&D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내용 |

구분	간소화 이전	간소화 이후
공통 증빙	① 연구소 인정서 ② 연구원 등록현황 ③ 연구원 업무분장표	① <제외> ② 연구원 등록현황 ③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 증빙	④ 급여대장 ⑤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 ⑥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증빙 ⑦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④ 급여대장 ⑤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 ⑥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증빙 ⑦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연구활동 증빙 (기술검토)	⑧ 연구계획서, 내부보고서, 회의록 ⑨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⑩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 자료 등	⑧ 내부보고서, 회의록 ⑨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⑩ <제외>

- (신청서류 보안 강화) 신청기업이 안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열람권한을 심사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제출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10 사전심사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신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지방청에서 실시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심사를 본청의 각 분야별 기술심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기계·장비, 전기·전자, 화학, 건축·토목, 정보통신, 디자인·콘텐츠 등 총 8명 운영
 - 더욱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신청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204-3923~9)

참고 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 연구개발·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1) + (2) + (3)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일반 연구·인력 개발	(1) ㉠과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25%	㉣ 8%	㉣ Min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2\%$)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㉗ + ㉘)	
	㉗ 30%	㉗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㉘ Min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㉙ + ㉚)	
	㉙ 40%	㉙ 30%
	㉚ Min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	

-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참고 2 -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화면

[접속경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신청요령

- ①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을 통해 신청 화면 들어오기
- ② 신청내용은 '신청' 으로 자동 선택됨
 ※ 당초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선택
- ③ 기본 인적 사항은 로그인된 아이디로 자동으로 입력됨
- ④ 기본 인적 사항 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⑤ 첨부서류에 파일선택 클릭 후 첨부서류 등록
- ⑥ 신청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참고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사례 ①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요원의 인건비

인정

□ 사실관계

- (주)AA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됨

〈 (주)AA에 대한 사실관계 〉



□ 쟁점 사항

-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실제 소프트웨어 경력 있는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심사 결과

- ▶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를 인정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의미(조특칙 §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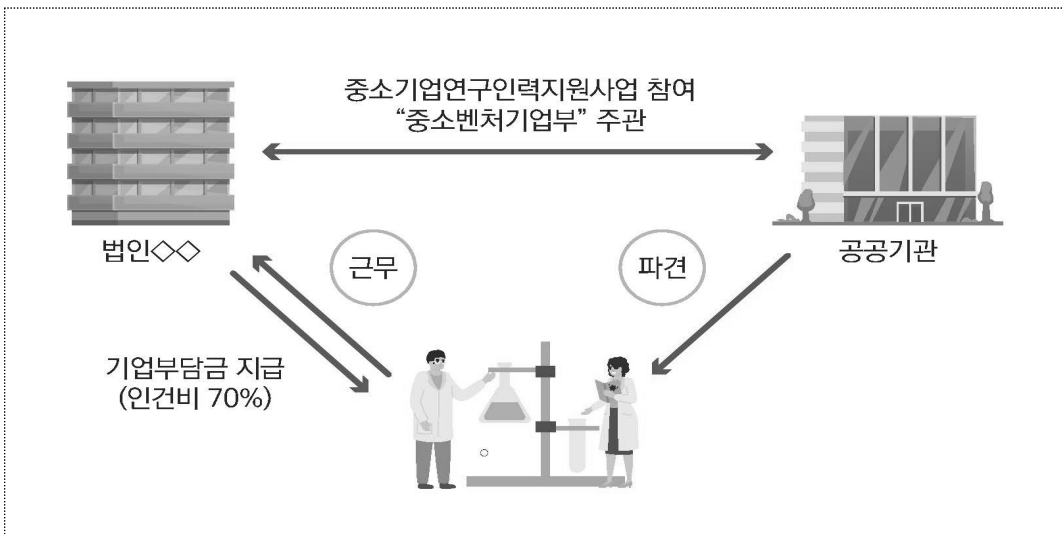
사례 ② 연구원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업부담금

인정

□ 사실관계

- (주)BB는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음
- 파견연구원은 (주)BB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하였으며 인건비 중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함

〈 (주)BB에 대한 사실관계 〉



□ 쟁점 사항

-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결과

- ▶ 인력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았고 파견 연구원이 조특칙 §7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연구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1)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①)

참고 4 -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① 사전심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② 대리인도 사전심사 신청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사전심사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를 통해 사전심사 담당자와 세분화된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구·인력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예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⑦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담당자를 변경하여 기술 및 비용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⑧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기술 관련 중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 금융위원회, 2023. 1

I 개 요

- 최근 금리인상,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자금상환 유예, 상장사의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 증가
 - 또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감사인의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으로 인해 부정적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가 요구됨
 - *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적·기술적 한계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22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II 부정행위 발견 감사사례 분석

1 부정행위 분석

- (부정 주체)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
 -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임



〈연도별 부정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비율
경영진	2	7	7	16	73%
직 원	1	3	2	6	27%
합 계	3	10	9	22	100%

- (부정 유형)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표시한 사례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 15건
- 무자본 M&A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
 -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

2 관련 감사절차

- (부정위험요소 발견) 대부분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 (15건, 68%)
- *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추세 분석, 비율분석 등도 포함됨
 - 해당 산업의 특성, 회사 경영진의 특성(무자본 M&A세력), 분개검증, 신규 거래처와 비정상적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을 통해 부정위험요소 확인
 - 이외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을 통해 발견

〈부정위험요소 발견 경위〉

구 분	분석적 검토	제보	자체조사	기타*	합계
건 수	15	3	1	3	22

* 세무조사 과정 1건, 채권채무조회 1건, 계류소송검토 1건

- (입증감사절차*) 부정위험요소가 발견된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감사기준에 명시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절차의 한계로 포렌식 등 외부조사를 추가 실시(22건 중 15건)
- *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표본추출을 통한 증빙 대사 등 포함
 - 매출·매출채권의 경우 가공매출, 건설사 공사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검토, 결산 이후 매출취소거래 검토, 세금계산서 증빙대사 등의 절차 수행
 - 대여금, 투자주식의 경우 계약서, 입출금 증빙대사, 외부조회 등의 입증감사절차를 수행

부정관련 계정과목

구 분	매출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주식	재고자산	매입 매입채무	유형자산	기타	합계
건 수	7	6	3	2	2	2	22

□ (감사 의견) 적정 8건(재작성 2건 포함), 의견거절 등 비적정 14건

○ 대여금, 투자주식의 경우 대부분 경영진의 비정상적 자금거래로, 감사절차의 한계로 인해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 표명

〈감사의견 (부정관련 계정과목별 구분)〉

구 분	매출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주식	재고자산	매입 매입채무	유형자산	기타	합계
적 정	3	1	-	2	-	2	8
비적정	4	5	3	-	2	-	14
합 계	7	6	3	2	2	2	22

부정행위 감사 관련 안내

1 감사시 유의사항

①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회사의 경우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에 부정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 필요

※ 무자본 M&A 추정기업 주요 특징

- ▶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조합 등)
- ▶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 진출
- ▶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 ▶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의 규모가 대폭 증가

②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시 유의

○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상장회사 시장조치대상 중 주요 재무기준

- ▶ 매출액 미달(유가상장 50억원, 코스닥 30억원)
-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코스닥)
-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사업손실(코스닥)
- ▶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50% 이상 자본잠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및 제48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 및 제54조

③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 건설중인 자산, 선금급 등은 계정과목 성격상 일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임에도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④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관계, 빈번한 자금거래 발생 사유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⑤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 인터넷 검색,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동향 및 업계 마진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회사의 특이거래 여부 파악
- 또한, 동종 산업 소속 기업의 회계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파악하여 감사시 참고
 - * 건설사의 경우 현장 간 공사원가 이동 등의 방식으로 공사진행률 조작을 통한 공사 수익 과대계상, 제약사의 경우 개발비 과대계상 등

2 부정행위 등의 보고의무 충실한 이행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1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2 실시 필요

*1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의 존재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2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

-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사실을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3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제고 필요

① 회계법인의 디지털감사 역량 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부족, 인터넷 상거래 등 복잡다변한 거래, 부정거래 증가 등 늘어난 감사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감사* 역량 강화 필요
- * 대용량 데이터 분석기술, 감사절차 자동화 등

② 부정 감사절차 관련 내부교육 등 강화 필요

- 감사팀원이 감사중에 잠재적인 부정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효과적인감사대응을 할 수 있도록,
 -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 최근 부정행위 유형, 감사시 발견사례, 전산감사기법 등을 중심으로 내부교육을 강화할 필요

IV 기타 안내사항

1 회계부정행위 인지시 적극 신고

- ☐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
 -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최대 10억원)
 -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면 동 임직원에 대한 조치 감면

2 투자자 등의 신중한 공시정보 확인

- ☐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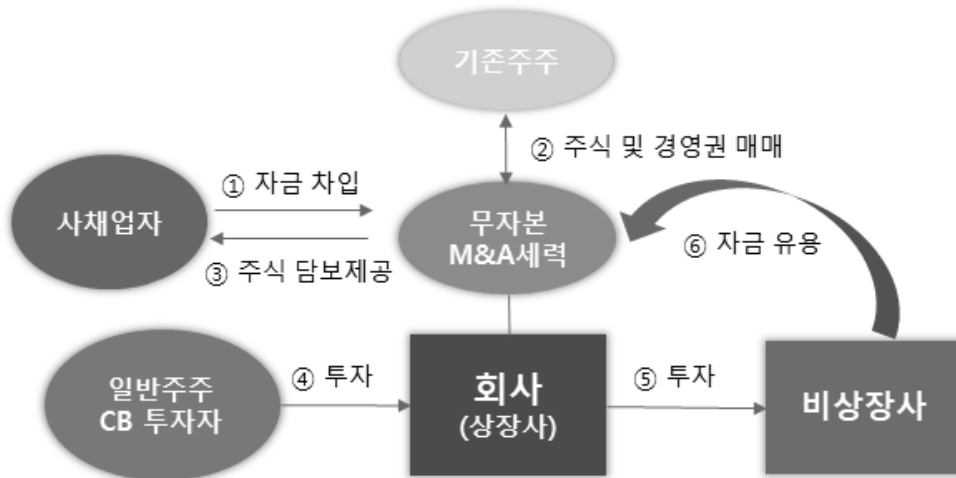


참고 1 - 감사 중에 발견된 주요 부정행위 사례

(사례1) 무자본 M&A를 위한 가공의 투자금 계상

부정행위

- 무자본M&A세력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사에 투자한 후 동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발견경위

- 감사인은 최대주주 변경 및 분쟁,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자금 차입 계약으로 인한 파산 신청 제기 등 부정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
-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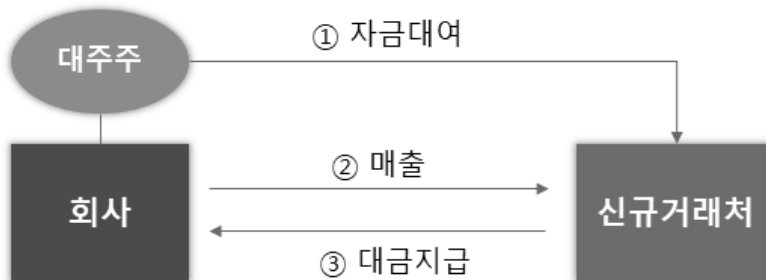
유의사항 1

- ◇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과 동시에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경우, 대여금, 투자주식 등 계정과목의 실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사례2) 가공의 매출 인식

부정행위

-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 ①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② 회사는 동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③ 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회사의 부정 가능성을 인지 하고, 가공매출을 발견함
- 연말에 체결된 신규 거래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중 대량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경 상적 거래 발견
 - 매월 신규 거래처 대표에게 기타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지출 발견 (가공매출에 대한 대가 의심)
 - 회사가 동일 거래에 대하여 매출 계정 검증시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최종 자료 제출시 제 시한 거래명세서가 불일치
 - 신규 거래처 재무제표 검토 결과 실질적인 사업 영위 능력이 없음이 확인됨

유의사항 2

- ◇ 상장폐지 위기 기업 감사시 재무요건 미충족이 우려되는 계정에 특히 유의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거래의 경우 거래처의 경영진이나 재무상황에 대한 추가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들간 일치여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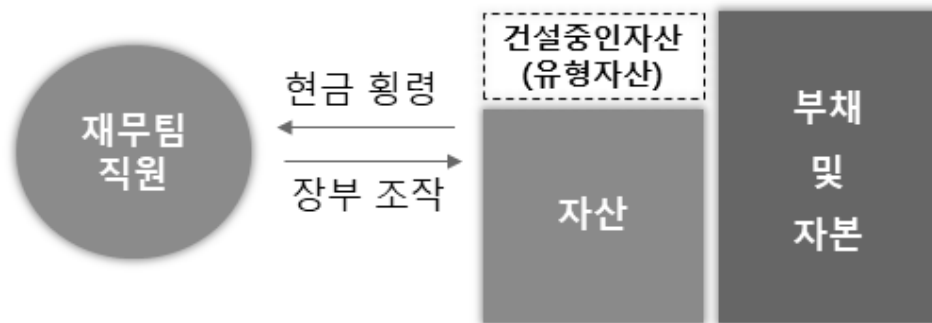


(사례3) 직원 횡령 및 가공의 자산 계상

부정행위

-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무단 송금하여 사적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된 자금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함

*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유형자산의 건설(제작)에 지출된 모든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으로 건설(제작)이 완료되면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건설중인 자산에 거액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어 자산의 실재성을 의심하게 됨
- 감사인은 회사에 자산의 실재성 및 손상 검토 자료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외부전문가 조사를 통해 직원에 의한 자금 횡령사실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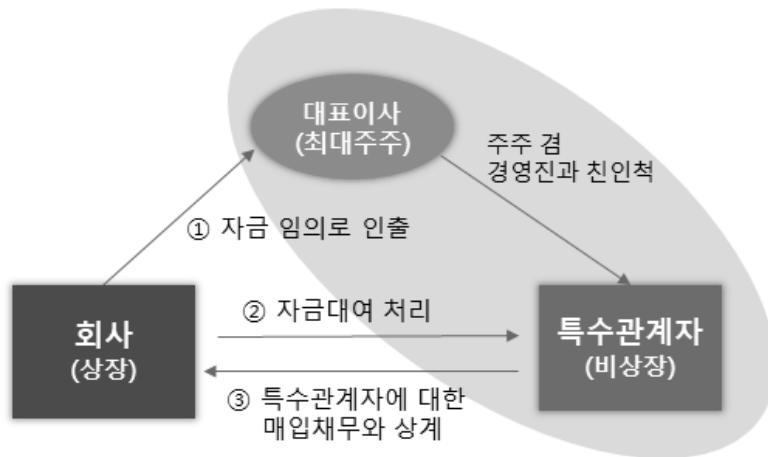
유의사항 3

- ◆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등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금액이 과다하거나 장기간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재성에 대해 거래처 조회, 거래처 재무상태 확인 등 외부증빙 확인 필요

(사례4) 대표이사의 자금유용

부정행위

-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함
-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출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처리하고, 매 분기 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등과 임의 상계처리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부정위험요소를 발견함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잔액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잔액 규모가 거래 상대방의 영업규모를 고려할 때 과다함
 - 대여금 장부에 분기말 특수관계자 매입채무와 상계 처리된 금액이 분기결산 후 다시 대여금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회사 장부에 계상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이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함
- 감사인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횡령사실을 확인

유의사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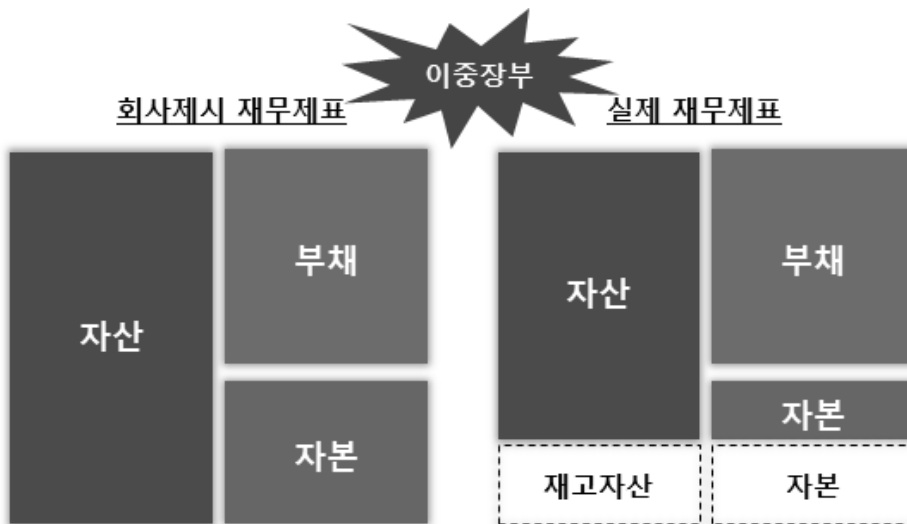
- ◇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회사는 최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의심하여 분개검증을 충실하게 할 필요



(사례5) 가공의 재고자산 인식

부정행위

- 회사는 주권상장을 위해 가공의 재고자산을 인식함
 - 회계담당 임원이 가공의 재고수량을 재고수불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장부를 유지해옴



발견경위

- 감사인은 회사 제품의 특성과 고객 유형을 기초로 볼 때 회사의 매출 마진율(매출총이익/매출액)이 지나치게 높아 판매된 제품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을 개연성을 의심하여,
 -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확대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더 많은 표본을 선정하여 확인하고, 재고수불부와 실제 재고자산을 양방향에서 추적, 대사한 결과 재고수량이 상이함을 발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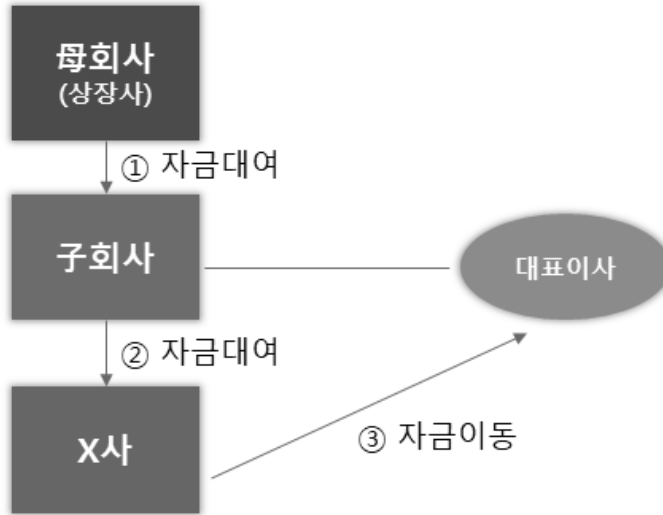
유의사항 5

- ◆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동종 산업평균 또는 동종업체의 매출이익률 비교 등을 통해 재무수치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자료간 수량 불일치 등의 단서를 간과하지 말 것

(사례6) 대여금을 이용한 횡령

부정행위

- 모회사(상장사)가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후, 자회사가 대부업 등 사업 목적을 표방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대여를 진행하였고 동 자금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짐
 -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후 다시 자회사가 대부업 등 사업 목적을 표방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대여를 진행함
 - 중간감사시 자회사 대표이사가 대여받은 회사를 관리하는 정황이 발견되고, 빌린 돈을 본인 통장으로 다시 받는 거래를 발견하게 됨
- 감사인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자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확인

유의사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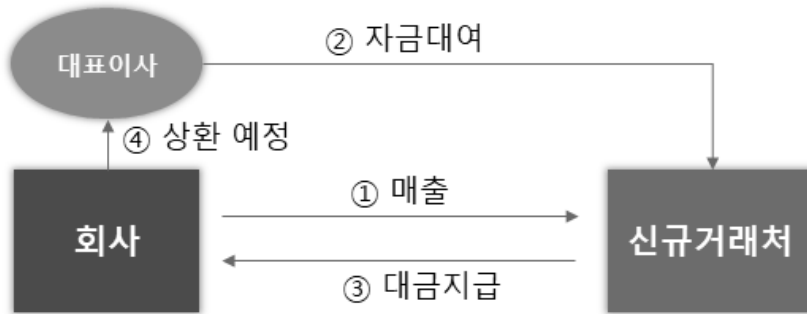
- ◆ 비정상적인 대여 거래는 발생시부터 거래 상대방의 사용처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거래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



(사례7) 부실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가장

부정행위

- 회사는 부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 회사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본인 자금을 일시 대여하고, 거래처는 동 자금으로 매출채권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후, 나중에 거래처가 실제 매출채권을 상환하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회사와 거래처간 소송을 인지하고,
- 재무제표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과 소송가액의 차이가 큰 점에 의구심을 갖고 前대표이사에게 질문한 결과,
 - 前대표이사가 거래처에 개인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채 및 손실을 과소인식한 사실을 발견함

유의사항 7

- ◇ 소송 관련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한 단서일 수 있고, 자료간 금액 불일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

참고 2 -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 ②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 ③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 ④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 ⑤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4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①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http://www.fss.or.kr>) 오른쪽의 「회계부정신고」 클릭

(실명신고)

② “신고하기” 클릭**③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후 “다음단계” 클릭****④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익명신고)

②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③ “신고하기” 클릭****④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⑤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우편번호 : 07321)

3) (F A X) 02-3145-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 클릭**②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③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⑤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 : 03736)

3) (F A X) 02-3149-0390 (감리·윤리행정실)